

‘부동산투기’ 1년만 마무리...국회의원 본인·가족 14명 송치

국수본,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 결과 발표 국회의원 등 공직자 327명 검찰로 넘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정부의 부동산 범죄 수사가 1년 만에 마무리됐다. 수사를 주도한 경찰은 국회의원 6명을 포함해 4000여명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부동산 투기사범 정 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 1671건 6081명을 수사해 4251명을 송치하고, 이 가운데 6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1057명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또는 불입건 결정했으며, 773명은 입건전 조사(내사) 또는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신분별로 보면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 658명을 수사해 327명을 송치했다.

이와 별개로 공직자 친·인척 215명을 수사

해 97명을 검찰에 넘겼다.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전·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총 33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6명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6명은 본인이 아닌 친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관련된 가족 8명을 송치했다. 나머지 국회의원의 21명 중 16명은 무혐의, 5명은 공소시효 경과로 결론났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국회의원 수사에서 정치적 고려는 없었고, 확보 가능한 모든 증거 등을 통해 본인과 가족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했다”며 “다만 단순 의혹으로만 고발되거나 접수 단계부터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송치된 국회의원 6인은 정찬민·김승수·한무경·강기훈·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의

경우 용인시장 재직 시절 건설업체로부터 부당이득을 수수한 혐의로 유일하게 구속됐다.

김경협 의원은 부천 역곡동 땅 매입 미신고 혐의를, 김승수 의원은 경북 상주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의뢰된 한무경 의원은 해당 혐의는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강기훈 의원은 과수원 토지보상금을 과다 지급받았다는 혐의를 받고있고, 배준영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전국적인 부동산 범죄 단속의 계기가 된 전·현직 LH 임직원은 총 98명이 수사를 받았고, 61명이 송치됐다. 10명은 구속됐다.

투기 유형별 송치 사건은 농지 투기 의혹이 12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 투기 602건, 기획 부동산 531건, 불법 용도변경 517건, 불법 전매 348건, 명의신탁 338건, 내부정보 부정 이용 209건, 불법 중개 126건, 금품 수수 27건, 기타 347건이다.

경찰은 부동산 범죄 수익 총 1506억6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유형별로 보면 내부정보 이용 의혹 관련 수익이 1192

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획부동산(257억8000만원), 금품수수(31억6000만원), 기타(24억4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송영호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별수사본부에서 처리한 중요사건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금일부로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한다”며 “투기 범죄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 수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주도의 부동산 범죄 합동 수사본부가 출범한 것은 지난해 3월10일이다. 지난해 초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했고, 사회 곳곳에서 유사한 의혹이 잇따르자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남구준 국수본부장에 정부 차원의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수사 대상은 투기 의혹을 넘어 부동산 범죄 전반으로 확대됐고 무려 1500여명이 넘는 인원이 투입됐다.

남 본부장은 “성과와 관련해 국민 기대에 미

치지 못했다는 점은 알지만 최선을 다했다”며 “내부정보 이용 불법행위, 기획부동산 등을 집중 수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자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았지만 고질적 범죄를 밝혀내 의미가 있다”며 “2기 신도시 특별단속은 검거 인원이 1만명이 넘지만 공직자 27명에 일반인이 다수였다. 2기 때보다(검거한) 공직자가 24배 더 많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수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신도시 투기 혐의로 송치한 일부 LH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즉시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무죄판결 취지는 다수 범죄 혐의 중 일부 혐의에 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수사과정의 적법절차 문제와 관련해 “수사 당시 피의자들에게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고 진술 임의성도 확보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했다”고 전했다.

박남진기자

경찰 “이근 등 우크라이나 추가 입국자 확인”

남구준 국수본부장, 21일 정례 간담회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유명해진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와 함께 의용군 참전을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입국자가 추가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은 21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이 전 대위와 동반 출국한 신원 미상 2명에 대해 “출국 이후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으로 서울청 국제범죄수사계에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위의 출국길에 동행한 2명은 지난 16일 귀국했다. 경찰은 이들의 자가격리가 끝나는 대로 정식 조사할 계획이다. 남 본부장은 “지난 주말 이 전 대위와 우크라이나로 추가 입국한 사람이 있는데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외교부가 지난달 13일부터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한 국가다. 강제성이 있는 4단계 경보를 어기고 무단으로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또한 남 본부장은 김·경 수사관 재조정 우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경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대

통령 당선인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 일각에서는 김·경 수사관 조정이 다시 원점 복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남 본부장은 “수사권 조정은 20년 넘는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 숙의를 거쳐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다”면서 “새 정부에서도 틀을 유지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 보완수사는 형소법에서는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할 수 있다”며 “공약은 검사가 송치 후에 직접 수사하도록 개정한다는 건데, 국민 편의 관점에서 법무부,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20대 대선과 관련 윤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및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남 본부장은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 기재’ 의혹 고발 건과 관련해 남 본부장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하는데 고발인,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고 자료 분석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했다.

서선욱기자



간직하고 싶은 3월의 설악산 설경

춘분인 21일 오전 관광객들이 강원 양양군 오색령 설악산 국립공원 남설악에서 보는 설경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고 있다

만취운전하다 전남대 앞 화단 ‘뺨’...20대 남성 입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전남대학교 정문 인근 화단을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26)씨를 붙잡아 조사하

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 북부 용봉동 전남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1%인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정문 방면으로 향하던 중 화단 앞 경계석과 화단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